

【서평】

폭격은 제노사이드다:

폭격의 역사로 본 대량학살의 구조

* 김태우,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파주: 창비, 2013.

강성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폭격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다. 이라크전쟁 개전과 시작된 미 공군의 압도적 위력의 폭격. 그 강렬함은 단지 ‘대량’이어서가 아니라 CNN 방송 등에서 시각화된 ‘초정밀’ 무기체계의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방송에서 목격한 전쟁은 피와 살이 튀는 참혹함이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매끈한 스펙터클이었다. 그런데 그 시각의 사각은 무엇이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알자지라 방송이 그 사각을 시각화했다. 정밀폭격의 결과 파괴된 것은 시장과 민간인들이었다. 특히 머리가 반쯤 날아간 이라크 소년의 처참한 모습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당시 미국은 이를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로 규정했다. 이 용어는 “정당한 군사목표가 아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비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입힌 상해 혹은 손해”를 의미하는 군사적 용어였다.

『폭격』의 저자인 김태우가 책 서두에서 ‘부수적 살인’이라는 동영상을 언급했을 때, 그 기억이 오버랩 되었다. 미군 아파치헬기 조종사들이 바그다드 근처 소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는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기총소사를 한 후 그 장면을 보며 농담하고 웃는 모습, 이를 두고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임무였음에 틀림없다”(김태우, 2013:16, 이하 쪽수만 표기)고 강조하는 저자. 이를 두고 가만히 곱씹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것이다. 조종사들의 행동은 결코 평범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충격적 모습인데, 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영상의 제목은 왜 ‘부수적 살인’일까?

‘부수적’, 즉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조종사들이 민간인들을 무장한 적으로 오인했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조종사들의 오인이 아니라 일방적 간주였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이는 분명 저자가 앞서 조종사들의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임무”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미군 조종사들의 행위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백년에 걸친 인류 공중폭격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비행에 성공하자마자 공중에서 지상을 폭격하는 자멸적 꿈에 빠져들게 된 역사”(20)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차 대전 시기 군사정책으로 채택된 대량폭격은 조종사 개인의 (선/악) 성향을 뛰어넘는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저자가 10년 넘게 한 길로 정진하면서 분석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의 실체는 그러한 차원에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 ‘실체’란 그가 엄청난 높이로 쌓아올린 자료 더미를 꼼꼼히 분석하며 구성한 실증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사실들 속에서 건져 올린 대량폭격의 구조적 실체가 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폭격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면서 설령 전술적인 정밀폭격이 추구된다

하더라도 폭격은 구조적으로 대량학살을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폭격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군사적 폭격이론을 넘어서 제노사이드(genocide)¹⁾ 이론, 더 나아가 폭력론의 지평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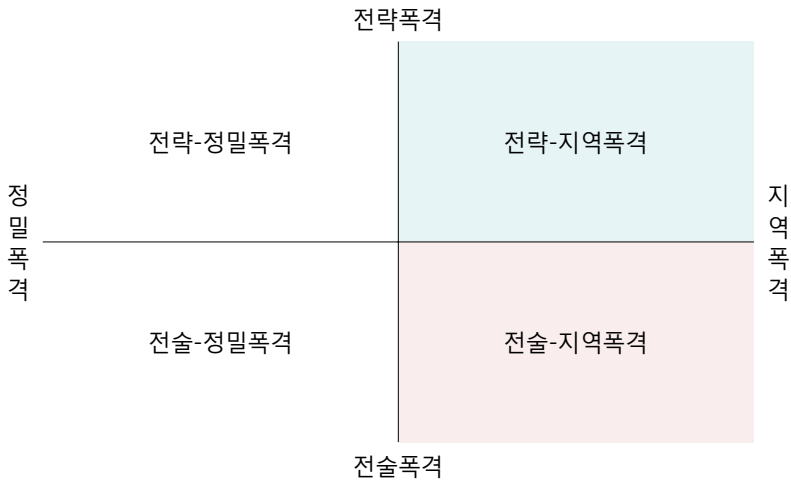
2.

책 1장의 폭격의 역사는 ‘개관’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저자는 양차 대전의 폭격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도에서 달았을 것이다. 동시에 이 장은, 아마 그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책 전체를 읽어나가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관이라 할 만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장은 ‘폭격의 유형화’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책 속에서 제시된 압도적으로 수많은 사실들 속에 매몰되지 않은 채 다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는 공군이론의 창시자들을 검토하면서 전술폭격과 전략폭격, 그리고 정밀폭격과 지역폭격의 개념들을 추출한다. 전술폭격은 제공권 장악을 통해 지상·해상부대의 작전·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중폭격을 말하지만, 전략폭격이란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 적의 주요 도시, 생산시설, 전력·교통·통신시설, 정치·군사의 중추부를 파괴하는 공중폭격을 의미한다(28). 또한 정밀폭격은 주요 군사·산업시설에 대한 제한된 공중폭격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

1) 제노사이드는 통상 ‘집단살해’, ‘대량학살’의 의미에서 사용되지만, 본래는 그러한 물리적 파괴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삶의 토대 및 사회적 양식에 대한 사회적 파괴를 포함하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대량학살은 제노사이드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이 주도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맥락은 삭제되어 제노사이드는 의도성을 가진 집단살해로 축소되었다. 강성현,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 제노사이드의 정의와 적용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8 (2010); 역사학연구소 편, 『한국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과 역사쓰기』, 서울: 선인, 2010, pp.225~227.

해, 지역폭격(또는 목표구역폭격)은 군사용도시설과 주변 민간주거구역 등 시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군사 목표로 간주하고 무차별 폭격하는 것을 말한다(29, 35). 이 개념들을 활용하면 다음의 표를 만들 수 있다.



〈표 1〉 폭격의 유형화

제2차 세계대전은 전략폭격으로서의 지역폭격이 무차별적으로 실시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전략-지역폭격이론의 창시자들이 의도했듯이, 폭격의 주요 대상은 후방의 적 국민, 즉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다. 1940년대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도시에서 전략-지역폭격으로 엄청난 양의 소이탄이 대량 투하되었고, 그 불바다 속에서 민간인들, 그 중에서도 여성, 아이, 노인 다수가 학살되었다. 특히 함부르크(1943.7.27.), 드레스덴(1945.2.13.), 도쿄 폭격(1945.3.9.)으로 단 하룻밤 사이에 사망한 민간인은 각각 약 5만 명, 3만 5천 명, 10만 명이었다.

이 대량폭격은 일반의 법-윤리 감각에서 볼 때 비인간적인 범죄였고, 조직적인 전쟁범죄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폭격으로 인한 대량학살은,

마크 셸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잊혀진 대학살(Forgotten Holocaust)’이 되었다. 연합국이 추축국의 대량폭격을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문제 삼게 되면, 그것이 연합국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만이 유일무이한(unique) 대학살로 단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현대성과 문명-폭력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토대의 절반을 인류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꼴이 되었다. 물론 나머지 절반의 토대가 전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기준, 세계인권선언,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정 등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성찰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당시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매우 취약한 것이었다.

3.

냉전의 형성과 한국전쟁의 발발은 그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저자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전쟁 내내 한반도 전역에 미공군의 공중폭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감내해야 했다. 공중폭격과 관련한 정확한 인적 피해 통계가 없지만, 북한 지역의 민간인만 최소 28만 2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385), 남한의 경우 전체 집계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²⁾

한국전쟁기의 공중폭격이 특징적인 것은 전략-지역폭격뿐만 아니라 전술-지역폭격 개념의 무차별 폭격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개전 이후 유엔군이 지상전에서 급격히 밀리자 B-29 중폭격기를 동원해 지상군 근접

2) 공중폭격과 관련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부분 통계는 있다. 공보처 통계국이 집계한 1950년 6월 25일~9월 28일 서울시 ‘공폭’으로 인한 인명 피해 통계가 그러하다. 이 통계는 미 공군에 의한 이른바 ‘용산폭격’의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지원작전을 벌였다. B-29 98대를 동원해 가로 5.6km×세로 12km 직사각형 구역에 무차별 폭격한 왜관의 ‘용단폭격’(1950.8.16.)이 대표적 사례다(231~233). 그 결과는 유엔군 스스로 인정했고 북한군이 조롱했듯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헛방’이었다. 대신에 그 지역에 있던 두 개의 마을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인근에 있던 피난민들도 불바다에 휩싸인 채 사라져갔다. 아군 지상 지원 작전이든, 적군 차단 작전이든, 이와 같은 ‘맹목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쓰러져갔다. 오폭은 전선의 아군도 비껴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리역과 조차장을 비롯한 남한의 주요 역과 조차장,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 대한 ‘용단폭격’ 신화의 실체다.³⁾

그런데 아군을 포함해 우방 국민에 대한 이 같은 대량 폭격과 학살은 정말 의도적인 것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고 있고, 이를 보여주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폭격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논쟁, 특히 정밀폭격에 대한 저자의 세심한 검토는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은 민간인 피해를 가능한 제한하고자 정밀폭격을 의도했지만, 폭격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높은 오폭률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미 공군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 공군이 성공 사례로 자랑하는 흥남폭격(1950.7.30.-8.3.)만이 민간 피해를 제한한 거의 유일한 예외였다.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간에, 혹은 정밀폭격을 의도했더라도, 대량폭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 특히 민간인 대량학살이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 학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태된 학살이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폭격의 구조’와 그 한계를 분석하는 대목에 이르면 더욱 빛을 발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은 군사목표만을 향한 정밀폭격

3) 1950년 7월 11일 전북 이리역의 폭격 때 많은 지역민들이 투하되는 폭탄들을 ‘빠라’ 폭탄일 거라 생각해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한다. 당연 오폭의 결과는 끔찍했다.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립했지만, 당시 전략폭격작전과 전술항공작전의 통제시스템 한계와 항공기의 기계적 한계로 그 원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전략폭격의 경우 순수 군사시설과 민간인 인구밀집 구역이 서로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저고도 ‘육안폭격(visual bombing)’이 아닌 초보적 수준의 레이더에 의지한 구름 위의 ‘맹목폭격(blind bombing)’은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당시 B-29기의 목표물 적중률은 기계적 한계로 인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았다. “폭 10m, 높이 200~300m의 대형건물을 ‘파괴폭탄’ 하나로 적중시킬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우며, 최소한 100~200발의 대량폭격을 가해야만 50~60%의 적중률”(145~146)을 갖는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 정밀폭격을 의도했다는 말은 사실상 기만에 가깝다.

전술항공작전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쟁 초기 급격히 밀리는 지상전 상황으로 미 공군은 근접 화력 지원을 위해 전술항공 통제반과 공중통제관 ‘모스키토’가 목표를 유도하는 전술항공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초기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는 이내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표적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전술항공통제반이나 모스키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무선통신 상황도 열악했으며, 급변하는 전황 속에서 폭격선(bombing line)이 요동쳤고, 빠르게 비행하는 전폭기 안에서 주간에 이동하는 적 병력과 차량을 찾아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186).” 특히 전술 폭격기 F-80기(슈팅스타)의 항속거리는 매우 짧아서 목표 지역에 약 10-15분 정도 머물 수 있었는데, 이처럼 불안정한 무선 환경의 전술항공통제시스템과 연료 부족의 압박감이 더해지면 숨어 있는 군사적 표적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177). 그럼에도 임무는 완수해야 했기에 ‘적 병력’, ‘위장 병력’, ‘지원 세력’, ‘적 병력 집결지점’, ‘적 은폐 의심지역’ 등으로 일방적으로 간주된 표적에 갖고 있는 모

든 폭탄을 투하해 소진하고 기총소사를 가했다. 그 표적은 바로 민간인, 특히 ‘흰 옷을 입은’ 피난민이었으며, 일반 촌락과 마을이었다. 심지어 아군(유엔군)을 향한 오폭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저자는 당시 기능주의적 전쟁기제로 육성된 당시 미 공군 조종사들에 눈을 돌려 그들의 전시 행동양식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공군 조종사들은 육군·해군 장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학력이었으며, 기초교육과 훈련 과정에서도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지식이 배제된 채 조종 기술과 역량만을 요구받았다. 그 결과 전폭기 조종사들은 실전에서도 통제 시스템 상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무감각하게 임무 구역 내에 폭탄을 소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91).” 여기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전쟁수행을 위한 일종의 부속품으로 육성”된 그들도 사실은 인간이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조종사들에 대한 다양한 인터뷰 결과물을 활용해 그들이 민간지역을 무차별 폭격한 것이나 민간인, 피난민 공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정당화 방식을 탐구한다. ‘임무위스키’의 이야기, 자신의 전투행위를 일종의 ‘소명’으로 간주한 목사 출신의 조종사 딘 헤스의 이야기, 민간지역과 민간인을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는 ‘언어 꼬리표’ 등 조종사들이 인간으로서 제노사이드적 폭격을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조건들, ‘복종 범죄’ 연구자인 켈먼과 해밀턴 식으로 말하자면, ‘권위화’(권위 및 지시에 대한 복종), ‘일상화’(복종에 따른 폭격 행위를 일상적이고 기계적이며 고도로 프로그래밍된 작동으로 전환), ‘비인간화’의 과정을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비인간화’와 관련해 저자는 앞서 폭격의 대상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을 논의한 바 있다. 미 공군은 유럽에서와 달리 왜 일본에 대해 전략-지역폭격 정책을 고수했는지, 그리고 1948년 독도폭격사건을 분석하면서 “아시아인을 향한 미군의 인종주의적 편견”에 주목하고 있다. 미군은 “일본 놈들을 해충으로 여긴다”는 남서태평양지구 연합군 총사령관의 말은

나치가 유대인을 바라보았다는 시각 그 자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5년 후, 독도폭격사건 후 2년 후에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미군의 인종주의적 편견이 여전히 강력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판단은 더욱 본격적으로 분석해야겠지만 일단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 설명은 왜 폭격이 제노사이드적일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저자가 분석한 폭격의 구조 자체가 바로 제노사이드 메커니즘, 즉 제노사이드의 제도적 메커니즘, 심리적 메커니즘,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인 것이다.⁴⁾

이렇게 볼 때 저자가 “중국군 참전과 유엔군의 패퇴”(7) 이후 미 공군의 폭격이 정밀폭격에서 무차별적인 초토화 폭격으로 이행했음을 논하는 대목은 다소 일면적이다. 워싱턴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극동공군과 제5공군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런 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노사이드적 폭격의 피해를 다 받아내야 했던 민간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러한 시기 구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요 대도시와 일부 주변 마을에서 38선 이북과 적 점령지역 전체로 무차별적인 네이팜탄 폭격이 확산되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전쟁기 3년 내내 폭격으로 애초부터 주민들에게 ‘후방’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맥아더의 발언처럼 폭격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사막화된 구역”(316)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았더라도 지옥 같은 삶을 연명해야 했다. 1950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검토된 원폭 투하 가능성과 1952년 7월 이후 소위 ‘항공압력전략’이 야기한 대량 파괴와 민간인 살상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4) 실제 제노사이드 이론가이자 사회학자인 레오 쿠퍼는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연합군의 함부르크, 드레스덴 폭격을 제노사이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o Kuper, 1981,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 p.46.

4.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해이기도 했다. 2013년 4월 미국은 B-52와 B-2 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섬들에 모형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⁵⁾ 1951년 9-10월 허드슨항 작전으로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B-29가 북한 지역에 모형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공중폭격에서도 원폭 투하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파괴 방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를 종전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일본 민간인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정당화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기 수많은 제노사이드적 폭격과 원폭 투하 계획 역시 북한과 공산진영의 잔학행위가 더 악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합리화했다. 더 나아가 공식 미공군사에서 한국전쟁기 폭격은 오직 한국인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389).

미 공군 폭격으로 수많은 자국민 인명 피해, 물질 피해가 발생했던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1951년 3월 이승만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잘 드러나듯이, 당시 한국정부의 인식과 평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자유를 위한 전쟁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숭고한 희생이었다. “강한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논리로 미공군의 대민폭격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사실상 봉쇄했다(389).”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작금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2010년 ‘뉴라이트’가 주도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종 종합보고서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이 공격을 받은 측이며, 국가의 존망이 걸린 긴박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군사적 필요가 민간인 보호 규범 준수보다 더 컸다(391)”고 판단하였다. 미 공군

5) 브루스 커밍스, “핵 그림자에 덮인 한국의 정전체제,” 『창작과 비평』, 제41권 4호 (2013), p.349.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대량학살을 ‘부수적 피해’,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만 두고 판단하자면 60년 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강성현(Kang, Sung-Hyun)

서울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다. 최근 저서와 논문으로는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공저),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공저), 『전장과 사람들』(공저), “한국의 국가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등이 있다.